

I . 기관운영

I.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 기관의 목적	(육아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 등 육아정책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육아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관련 현안 및 정책방안 연구 -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육아지원인력의 자격제도의 관리 및 교육훈련 -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 기타 육아정책 관련 주요 사항 연구 - 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지원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 정치적 환경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함. 이에 따른 본격적인 정책 개발 및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제시 필요
 -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확충,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격차 해소가 강조됨.
 - 아동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이 강조됨.
 -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이 강조됨.
- 주요 국가정책 계획이 수립과 수정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의 정책 과제 및 추진

관련, 재진단과 정책 수정이 필요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유아교육혁신방안”,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 2020년 1월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

□ 경제적 환경

-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의 재정지출이 급증했지만, 국가책임, 공공성,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지속적 요구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이 OECD 평균 이상임에도 공보육 인프라(국공립 시설) 비율이 매우 낮음.
 -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안이 여전하고, 믿고 맡길 기관이 없다는 불신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자녀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 가족돌봄과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발생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은 보편화되었으나, 지역별, 기관유형별, 정부지원 여부별 실제 이용비용에 차이가 있고, 지리적 접근성, 서비스 질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 국가의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 노력과 동시에 영유아와 부모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 아동수당 도입으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육아휴직 강화, 성평등 관점에서의 육아나 근로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등에서 정책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육아를 포함한 가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선진 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면서도 우리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함(2020. 6. 1.).
 - 이에 연구소는 연구소의 대표 사업인 신규 한국아동패널 연구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 성과창출에 동참함.
 - 결과,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 아동패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인력 증원을 확보하였고 ‘아동패널·통계센터’를 설

립할 계획임.

□ 사회문화적 환경

-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의미함. 문제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
 - ※ 2018년의 합계출산율 0.98, 출생아 수 32만 6,900명,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 2019년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도에 비하여 0.06명 감소, 총 출생아수는 30만 3,100명으로 전년 대비 23,700명이 감소함.
- 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
- 신뢰할 수 있는 육아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아동권리가 강조됨.
- 육아정책은 태아부터 최소 초등학교까지를 포괄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정책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치중되어 있음. 육아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영유아기(보육·교육)에 집중되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이전(태아, 출생, 입양 등)과 이후 시기의 육아정책 부족 또는 정책간 연계가 부족함.
 - 영유아기 돌봄·교육정책(어린이집·유치원)에 치중,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 발생, 아동방임(나홀로 아동) 발생, 사교육의 높은 의존도, 부모의 경제활동 단절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함.
 - 지역사회 육아환경과 돌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하나, 이에 대한 육아지원,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3세대 가족 또는 부부-자녀 중심에서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비혼 동거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유형별 차별화된 육아지원 수요의 파악 및 지원관련 연구 필요
 -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의 아동도 약 20만 명을 초과함(다문화 영유아 약 12만 명).
 - 한부모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혼 동거가구도 점차 증가하여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모가 부재한 가운데 형성된 조손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취업으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 결혼·출산·육아를 사회적 책임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은 친밀감의 연장이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규명과 대응이 필요
- 결혼보다 ‘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육아를 ‘행복’보다는 부담 또는 고통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이미지 증가하고 있음.

- 육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모/가족에서 국가/사회로 빠르게 이동함.

- 성평등적 자녀돌봄 문화, 다양한 방식의 육아, 공동체적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및 기대가 확산됨.

-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면 중심 시스템에서 비대면 시스템으로의 전환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계층, 가정, 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예컨대, 올해 들어 2030 여성 자살률의 현저한 상승, 영유아 대상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 등 ‘코로나 블루’ 현상과 관련된 아동, 여성, 노인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긴급돌봄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육아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임.

□ 과학기술적 환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디지털 기술환경 등의 변화로 육아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측과 준비 필요

- 기술발달,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육아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육아 수요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전망과 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육아 및 교육 관련, 가족환경, 지역사회환경, 정책환경, 사회문화환경이 변화되어야 함

- 코로나19 이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정책의 중요성이 커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가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미래세대의 인재 육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 이에 영유아기에 제공되는 보육·교육의 선제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역량을 반영, 생애초기의 보육·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보육과정 변화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육·교육 분야 기술의 변화, 인재육성 방향과 내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의 핵심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디지털기술 환경의 변화는 돌봄서비스 및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술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됨

□ SWOT 분석

<div>대내적 측면</div> <div>대외적 측면</div>		강점(S) S1.연구 분야의 배타적 선점 S2.아동에 대한 높은 이해와 축적된 연구자료 S3.관련 부처, 유관 학회 및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S4.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유연한 근무 환경	약점(W) W1.연구 인력의 다양성 및 역량 부족 W2.연구과제 주제가 협소한 편 W3.연구과정과 성과에 대해 구성원간, 대외적 공유 미흡 W4.산-학-민-연의 협동연구 및 다학제 연구 미흡 W5.연구소 및 연구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부족 W6.국내·외 네트워크 부족과 거점역할 미비 W7.연구 및 기관운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W8.조직위계구조 미성숙 및 행정체계와 전문성 미흡
		[SO전략] SO.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SO.인구 및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영역 확장 SO.한국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 기능 구축	[WO전략] WO.산·학·연 및 다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 WO.국내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WO.국제 육아정책 연구 정보 생산과 개발도상국 지원 WO.신뢰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기 회 (O)	O1.저출산 문제 지속으로 육아정책과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지속 O2.사회환경과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양한 육아정책 개발 수요 증대 O3.성인지, 가족 친화 강조로 남성 육아참여, 부모·지역사회 역할 관심 증대 O4.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아동학대 등) O5.초등학생 돌봄, 육아취약가구 지원 등 육아 관련 다양한 국정과제 O6.국제기구의 영유아 발달·보호·교육 등에 활동 증가 O7.일·가정 양립, 보육·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O8.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사회 각 분야의 대응 필요	[ST전략] ST.한국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ST.정책수요자의 연구 참여 및 성과 공유 확대	[WT전략] WT.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WT.육아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WT.혁신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WT.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성화
	T1.유사 연구기관과 육아정책 연구 분야 경쟁구도 심화 T2.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높은 책무성과 윤리성 요구 증대 T3.낮은 기관 위상(부설기관 지위)으로 인한 대외관계,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 T4.육아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증폭		

□ 고객 니즈 분석

- 정책수요자 및 정책행위자 등의 이해관계당사자 의견 적극적 경청(KAL: KICCE Active Listening)

- 열린토론회의 목적은 육아정책연구소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육아정책연구소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영유아와 부모, 사회를 위한 공익적,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기술: 적극적 경청(KAL: KICCE Active Listening)
- 운영 방식: 열린토론회 형식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등인 국회, 학계, 부모, 정부 부처, 현장(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요구를 수렴

정책 수요자	주요 요구와 과제
1차-1 국회의원 등 (축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문제 심각,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기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등
1차-2 관련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발달과 복지, 가족관계 분야 등 연구범위 및 분야 확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진단과 분석, 국책연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확대 •가난한 사람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국가 정책 개발 필요 •‘확대’와 ‘융합’을 모색하는 연구 •지속적인 유보 격차해소와 일·가정 양립 연구 수행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2차 부모 보육교육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의 사회적 인정과 위상, 정책적 수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자성 필요 •정부부처의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연구에서의 균형성과 형평성 확보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 •연구의 독립성 확보 •연구수행에 있어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참여 강화 등 필요 •주요 연구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문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성 평등 연계 연구 - 영유아 (정서)발달에 대한 종단연구 등 기초 연구, 아동권리 연구 -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교사 관련 연구 - 사회구조적 문제와 육아정책간의 인과관계 등 사회정책으로서 육아정책 연구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 재정립 연구 등
3차 정부부처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정책의 전문성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중립적,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연구성과 제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 •정책투자의 효과 등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세밀한 정책연구 병행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정부부처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지속적 정책연구 지원 •육아정책 관련 해외사례 및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지속적 제공 •주요 연구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아동과 가족) 입장에서의 정책연구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방안 연구 - 학부모 안심교육인증제 관련 건강·안전 연구 - 영유아 사교육 경감 관련 연구 - 방과후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연구 - 아동학대와 부모교육 연계 연구 - 다양한 가족형태와 취약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연구 등
4차 시민사회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책의 중요한 주축인 ‘일(노동)’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들을 수행해서 연구소가 육아정책 이슈(논란)를 정립하고 선도해나갈 필요 •육아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 수용한 아동중심의 정책연구 필요 •정책수요자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연구 •아동패널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모-자녀 세대 간 소득차이 분석과 같은 거시적·중장기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불평등 연구 •무상교육·보육정책 재검토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등의 연구 필요 •언론과의 지속적 소통 강화 및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확산
--	---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2-1) 연구환경 분석

- ☐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 ☐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후속적 정책 대응 필요
 - 2020년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행과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유아들이 놀 권리, 쉼 권리와 동시에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 및 지원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3-5세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군·구청장 간 업무 협력이나 조정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 보육·유아교육 담당부처의 중·단기 정책방향 선도와 이에 따른 연구수요 증가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유자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함.
 - 한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새로운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남과 다른 육아방식, 육아물품 등의 관심이 커짐. 이러한 정책수요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연구 수요가 증가함.
- ☐ 다양한 사회 환경 체계에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 증대
 - 전통적인 사고에 입각한 연구의 틀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마다 다른 전달체제로 개입할 경우 각 종 서비스나 수당 등이 중복 지원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정책과 국민 체감도 간의 괴리를 파악하여 그 간극을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증대시키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사 재난상황에서의 긴급돌봄 시스템의 구축 연구가 중요해짐. 이번 경험을 통해 우수 대응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고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영상강의, 원격교육이 급부상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사양성 및 재교육 연구가 필요함.

□ 미래인적자원의 확보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범위의 확장

-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들을 위한 효율적이며 올바른 육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적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아동 지원 이외에 정부 차원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한 가정내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부모교육 방안 마련 요청에 대응해야 함.
- 결혼이민자 가족이 증가하고 이들의 자녀수도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및 글로벌 인적자원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지원 실태와 언어·정서 등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 연구 수요가 증가함.
- 상대적으로 간과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자녀 대상 연구 수요에 대응함.

□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발굴, 적용

- 최근 양적 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방법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 적용을 모색함.

2-2) 기관운영 목표

□ 육아정책 연구영역 확대 및 정책개발 선도

- 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 인구 및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영역 확장
- 육아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 기능 구축
- 국제 육아정책 연구 정보 생산과 개발도상국 지원
- 한국 대표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 연구과제에서 도출한 정책방안 토론 및 적합성 제고
- 산·학·연 및 다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
- 국내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 정책수요자의 연구 참여 및 성과 공유 확대
- 열린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 혁신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 신뢰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성화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육아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육아정책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선진 육아정책 구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 방안 및 전략 모색
- 국가의 주요 국정 아젠다와 기관의 연구주제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회적 육아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야 함.
 - 맞벌이, 다문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정책 추진 방안 모색
 - 출산력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
- 효율적인 육아지원정책의 실현을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미래 인력 확보에 기여함.
 - 결혼이민자, 새터민,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가족 영유아의 양육실태 파악 및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
- 기관의 경영목표를 실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의 주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주관부처)-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정부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 (사회적 약자 보호) '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p>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p> <p>** 가정폭력 현장대응물, 성폭력 미검물, 청소년보호지원물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p>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폭 확충
2-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44.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p>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 17년 25% →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 17년~)
<p>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p>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 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 17년~)
<p>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p>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 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 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운영('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 18년)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 등 3학년 ~ 5학년 → ' 20년 초등 전 학년)
<p>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p>
<p>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p>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p>
<p>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 (취약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p>3-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p>
<p>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돌봄 지원 확대) '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p>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p>
<p>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p>
<p>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행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능 지방이양) '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과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p>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19년) ○ (교육부 기능 개편) ' 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 17년)
<p>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p>
<p>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p>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Ⅱ. 사업추진 방향

Ⅱ. 사업추진 방향

1. 2021년도 사업목표

-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임.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1년도는 육아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생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의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함.
 - 돌봄 취약계층 아동과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 추진
 - 새 정부(2022년-2027)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 수립의 선제적 대응 준비
 - ‘증거 기반(evidence based)’ 기초자료의 수집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및 선도적 육아정책 이슈 발굴을 위해 패널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 확대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긴급돌봄, 비대면 교육·보육 체제 구축, 온라인 교육·보육 활동 등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 수요가 큼.
 - 코로나19 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의 일상화를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보육 시스템 구축 연구 필요
- 육아정책의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육아관련 정책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Mapping 및 연결망을 구축, 육아정책 정보화 포털을 구축함.
 - 육아정책 DB 구축 및 신속한 업데이트, 조사된 원자료 공개, 기본통계 정기 생산 제공체계 구축
 - 해외 육아정책 정보원 배치 강화와 정보 제공의 내실화
 - 국외출장 국가와 방문기관을 목록화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 육아 관련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자료 구축
 - 아동패널 외 일부 조사 원자료 공개
-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공조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국내 산·학·연 협력관계 강화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 해외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과 공동 연구 추진
 -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 증진 및 MOU 체결 기관과 연구 협력 활동 강화
 - 개도국 정책지원 모형 개발
 - 연구소 주관 협동 연구 추진 지속·강화

- 보육·유아교육 협력사업 확대 방안 모색
- 수요자 친화적 성과확산 채널을 다각화하여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확대를 통해 연구소의 학문적 위상 및 국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하며, 기관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로 기관 위상을 강화
 - 중장기 인력 계획을 통한 다분야 인력 충원과 연구역량의 강화
 - 육아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
 - 번역 보고서 발간 확대 지속
 - 국·영문 학술지 위상 강화
 - 발간물 출판과 대외 홍보 전담 팀, TF 운영을 통한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및 연구소 홍보활동 강화
 - 육아정책의 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국민의 공감대 확산
 - 적극적인 SNS 운영으로 대국민 육아정책 홍보와 소통 강화
- 정책입안자·수혜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과제 개발시 원장, 교사, 부모 요구 수렴을 강화함.
 -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지방정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정착
 - 원장, 교사, 부모 대상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과 여론조사 활용 강화(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 의견제안 인센티브 제도 강화
 - 과제 개발 수요조사 채널의 다각화상시 채널 강화로 활용도 높은 정책과제 개발
-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과제 개발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개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
 - 부모대상 정보자료 보급 확산
 - 홈페이지 자녀양육 정보 코너 확대
 - 육아물가, 교육·보육비 등 부모가 필요로 하는 통계 정보 제공
 - 정책토론회 개최 활성화
 -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이슈 관련 포럼, 세미나 정기적 개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와 주부무처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 기획하여 정책기여도를 제고함.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가정양육 환경, 기관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는 안심할 수 있고 아동은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는 육아문화 선도
- 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지원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초연구와 영유아 행복과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원하는 국가수준의 기초 자료 축적
- 보육·교육 환경의 질의 핵심인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지원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현하며, 재정적 효율성 제고
- 보육·교육비 추정 및 육아물가 산출의 정례화를 통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실증 근거 자료 축적
- 육아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 연구 수행
-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관련 환경과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 국제기구(OECD, UNICEF, UN 등)의 국제비교 연구 및 동아시아, 유럽과의 저출산, 육아정책 이슈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연구사업 추진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관계자 등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사업 추진
 -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실태 분석과 요구 분석 강화: 대상별 의견조사, 심층면담, 간담회 및 자문회의 적극 수행
 - 정책 방안 마련 시 사업 수행기관 운영자 및 실무진 대상 의견 수렴 강화: 간담회 및 자문회의 실시 등
 -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의견 수렴 통로 강화: 착수보고 자료의 부처 검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수시 실시 등
 - 다양한 정책수요자(국민, 시민단체, 기업, 언론 등)와의 소통과 참여 확대
 - 연구 성과의 정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열린 토론회(KICCE Active Listening)의 활성화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

-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부합하고, 국가 육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 국정과제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 초저출산 등에 따른 미래 인구구조와 육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연구
- 다학제 간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산·학·연 연구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 연구과제의 시의 적절성

- 급변하는 육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 과학성 및 기초성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전국 규모의 육아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축적할 수 있는 연구

☐ 정책 중요도 및 정책 활용도 및 기여도

-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 연구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연구
- 정책 방안의 정책적 활용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육아지원 정책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연구

나. 선정절차

- 2021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원외 수요조사 및 원내 연구과제 공모(2~3월 중)
 - 원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단체,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과제제안서 요청)
 - 원내: 2021년 연구사업 수요조사 실시(과제제안서 요청)
(석·박사 연구진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 2021년도 연구사업 계획서 검토·심의(3-4월)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직원의 실·팀별 워크숍 개최(3월)
 - 제1차 정책연구기획TF 개최(2. 28):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굴
 -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3. 13)
 - 제1차 과제선정위원회 개최(3. 30): 원내 연심에서 예비과제(기본, 일반과제) 선정
 - 제2차 과제선정위원회 개최(~4. 1): 선정한 예비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연구자문위원회)에게 서면검토 의뢰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4. 1): 제1, 2차 과제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일반과제 최종 선정 및 실행계획서 작성(4. 3~4. 10), 기본과제 예비 선정
 - 제2차 정책연구기획TF 개최(4. 28):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예비과제 소개 및 연구과제 추가 발굴
 - 제3차 과제선정위원회 개최(7. 7): 정부부처, 원외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 기본과제, 중점 과제 등 선정
 - 제4차 과제선정위원회 개최(7. 13): 소장 및 원내 위원 대상으로 실시, 최종 기본과제 검토 및 확정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7. 20): 제3, 4차 과제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기본과제 실행계획서 검토



- 2021년도 연구사업 선정 및 연구회 제출(일반과제: 4월 말, 기본과제: 7월)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소장이 검토 후 제출
 - 연구회 운영협의회 심의·검토
 - 최종 수정·보완 후 연구회 제출(주관기관 경유)



- 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원내외 의견수렴 및 연구과제 공모(9월~10월 중순)
 - 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변화된 육아정책 동향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연구과제 공모(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포함)



- 2021년도 연구사업 선정(10월 중순)
 - 기 선정된 연구사업과 추가로 수합된 연구사업에 대해 연구자문위원회의에서 심의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2021년도 연구사업 최종 확정(11월-12월)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소장이 검토한 후 최종 확정

□ 연구수요조사 반영결과

수요조사방법	제안기관 및 내용	발굴 과제명	예산(천원)
('20.4.28) 제2차 정책연구기획TF *교육, 보육, 복지, 보건, 과학기술 분야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	제안내용: 육아지원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현 지원체계 점검 및 뉴노멀 지원체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110,000
	제안내용: 올해부터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놀이를 발굴, 채집하여 누리과정에 접목 모색 및 궁극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유아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 간 전통놀이 활용방안 연구	75,000
('20.6.4~6.18) 상반기 제2차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과제명: "시설 돌봄서비스와 가정내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각 돌봄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내용: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중단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돌봄(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내 돌봄(아이돌봄서비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기관과 가정내 육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60,000
('20.7.7) 제3차 원내외과제선정위원회 *원내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연구자문위원, 정부부처로 구성	(보건복지부) 제안내용: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교육은 중요하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중심의 언어교육정책에서 모국어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정책이 필요. 어머니의 언어를 통하나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환경 조성은 영유아 자녀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영유아 이중언어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부모역량 강화 연구	80,000
	(원외전문가) 제안내용: 코로나 시기에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영유아교사의 역량증진을 위한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 필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90,000
('20.7.7) 제3차 원내외과제선정위원회 ('20.7.6) 교육부의 기본과제 선정 의견조사(서면)	(보건복지부) 제안내용: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희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가 필요. 제도상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영유아 인구가 희소한 지역(농어촌)은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지원 모색 필요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지원) 방안 연구	75,000
	(보건복지부) 제안내용: 영유아 미디어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필요 (교육부: 서면) 제안내용: 동일 영역(아동권리 강화 등 육아환경 변화)내 과제 중 본 과제를 1순위로 매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60,000

5. 중점연구사업

1) 선정기준

- 연구소 설립목적·비전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 국가정책 현안과의 긴밀성
- 국내외 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성

2) 중점연구사업 요약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기본연구사업)
	<p><input type="checkbox"/>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그 성과를 종합적,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세부전략, 소요예산을 제시하고자 함.</p> <p>○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추진 현황(예: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공립시설 확충,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시행, 유보 격차 해소, 아동수당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제한점 분석</p> <p>○ 대국민조사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p> <p>○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p> <p><input type="checkbox"/>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p> <p>○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 분석</p> <p>○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p> <p>- 코로나19로 인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 및 향후 전망</p> <p>○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환경변화 전망 및 동향 분석</p> <p>○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초안)의 중요도, 우선순위도와 적합도 분석</p> <p>○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p> <p>- 비전,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추진전략, 연차별 실행안, 정책과제별 소요예산 등 제시</p> <p>○ 정책 모니터링 방안 제시</p>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2	<p>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기본연구사업)</p> <p><input type="checkbox"/> 본 연구는 상시위험으로 자리잡은 글로벌 감염위험과 환경의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여, 현재 아동과 청소년 및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양육지원체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현 시점 가능한 양육지원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육아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p> <p>○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육아를 보장하는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체계를 제안함.</p> <p><input type="checkbox"/>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p> <p>○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가져온 자녀 출산과 양육에의 변화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족 환경에 미치는 영향 <p>○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드러난 육아분야 공백과 사각지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서 나타나는 교육보육돌봄의 사각지대 발생과 격차 - 감염위험 및 밀집도가 높은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 <p>○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의 뉴노멀과 새로운 어젠더 요구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육아지원 요구 및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 특별재난지역 등 지역별 육아지원 요구 및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육아지원 요구 및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p>○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모색</p>
	<p>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연구</p> <p><input type="checkbox"/>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출생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복합적이고 다면적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저출생 시대의 핵심정책인 육아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확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p> <p>○ 2022년 출생 0세 한국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p> <p>○ 2020년대 육아정책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정과 부모,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횡단적·종단적 영향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책적 영향, 신생아 이전 태아기 성장 환경과 부모 조건 등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범위 확대 추진 <p>○ 기존 2008 아동패널 코호트의 발달적 변화, 성장환경 및 정책적 변화의 비교를 통한 육아정책 효과 및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근거 자료 도출</p> <p>○ 연간 1회 이상 공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산출하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학술적 연구 논문 발표 학술세미나 개최</p>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p><input type="checkbox"/> 2021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참여 임부 패널 모집, 중장기 연구내용 계획 수립, 2022년 조사 준비 등 ○ 2021년 참여 임부 패널 대상 기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아동의 어머니/아버지 대상으로 가구 및 지역사회 특성, 부부친밀도 관계성 특성, 태아 특성 등 -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건강특성, 양육관련 특성, 부모 직업특성 등 ○ 장기적 시각에서 영유아 패널에 요구되는 조사 내용의 영역을 구성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연도별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